

도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시위대에게 줄줄이 소환장을 보냈다. 경찰이 연말까지 수사한 사람은 1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됐고, 660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출석요구를 했다.

불법·폭력 시위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주도한 혐의로 한상근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이틀 뒤인 11월 16일 경찰의 추적을 피해 조계사로 은신한 이후 25일간 숨어 지내다 경찰이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압박 강도 수위를 끌어올리자 자진퇴거한 뒤 구속됐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핵심 지도부에 대해서도 구속하거나 불구속입건하는 등 강력한 수사를 벌였다.

■ 경찰, 폭력시위 ‘강공모드’에 민주총 등 ‘과잉진압’ 거센 반발

또 11월 21일에는 민주총 본부와 산하 단체 사무실 12곳을 등시다발 압수수색해 각종 시위용품과 사전에 민중총궐기를 준비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폭력·과격 시위의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배후에서 이를 조종한 단체의 책임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특히 폭력시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경찰청에 전담팀을 꾸리는 등 강력한 사후조처에 나섰다.

경찰 전담팀은 불법·폭력 시위로 파손되거나 시위대에 빼앗긴 차량 52대와 카메라 등 장비 143점, 시위 대응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과 의무경찰 92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억 8천여만원의 손해액을 산정했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이처럼 강력한 사후대처에 나선 것은 더 이상 불법·폭력 시위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집회 장면이 일부 방송사 뉴스를 통해 생방송되면서 불법·폭력 시위 장면을 안방에서 지켜본 국민들이 진보진영 단체의 극렬 행위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된 것이다.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 공안정국 조성 의도 비판 등도 이어졌다.

경찰이 물대포에 대해 ‘안전한 이격 장비’라고 주장한 반면 진보진영 단체들은 이번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백남기 씨 사례를 들면서 물대포가 무기나 다름없으며, 살수는 시민에 대한 공격 행위여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경찰이 시위대의 상반신을 조준해 고압으로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팔목골절, 두피열상, 흉채출혈 등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경찰이 물포에 섞는 합성캡사이신(PAVA) 최루액이 돌연변이 유발, 발암, 심혈관독성, 신경독성, 사망 등에 이르게 하는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라며 사용금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집회·시위 자유와 폭력 집회의 부당성,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이어지자 유엔에서는 마이나 키아이 ‘평화

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으며, 키아이 보고관은 “한국에서 최근 수년간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계속 후퇴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과 보수단체는 엄연한 불법인 폭력시위로 인한 일반 시민의 피해, 우리나라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된 조사결과라며 반발했다.

롯데그룹 형제 간 경영권 분쟁

■ 개요

신격호(95) 총괄회장이 창립한 롯데그룹은 현재 한국 재계 5위의 대기업 집단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현 롯데그룹 회장의 치열한 경영권 다툼은 2015년 7월 그룹 오너 부자(신격호-신동빈) 간 ‘해임 공방’으로 처음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2016년 3월까지 한·일 양국에 걸쳐 신동주·동빈 형제 간, 신격호·동빈 부자 간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정상 여부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결국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대리인) 지정 재판으로써까지 확장된 상황이다.

지난 2000년 옛 현대그룹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약 6개월 만에 계열 분리로 일단락된 것을 감안하면, 롯데 사태는 국내 5대 그룹 사상 최장기 경영권 분쟁으로 남게 됐다.

■ 2014년 말부터 내연…결론없이 지루한 공방

2014년 12월에서 2015년 1월 사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주회사 일본



▲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후계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15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로 출근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홀딩스를 비롯해 다수 일본 계열사 이사에서 잇따라 해임 될 때까지만해도, 롯데의 경영권은 이번 없이 차남 신동빈 회장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더구나 2015년 7월 15일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정기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돼 한·일 롯데를 총괄하는 '원톱' 자리에 오르자 '롯데 후계자 신동빈'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같은 달 27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앞세워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신동빈 회장을 해임하는 등 '쿠데타'를 시도하면서, 잠재된 경영권 갈등의 뇌관이 터졌다.

바로 다음날 신동빈 회장이 주도하는 홀딩스 이사회는 창업자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 국면을 원상으로 돌리자 롯데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이후 신동주·동빈 형제는 끊임없이 "내가 진정한 후계자"라며 경영권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와 주총에서의 '법적 승리'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버지의 뜻'을 각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법적으로도 양측은 업무 방해·명예 훼손·해임절차 등을 문제 삼아 맞고소한 상태로, 일본과 한국에서 계속 관련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 신동주, 주총·소송 모두 '패색'...신 명예회장 성년 후견인 지정되면 '와르르'

롯데홀딩스와 계열사가 상법에 따르는 주식회사들인 만큼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가장 적법하고 정당하게 경영권을 탈환하는 방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신동빈 회장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의 주총과 이사회를 장악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데, 이미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8월 17일과 2016년 3월 6일 열린 두 차례의 주총에서 모두 동생 신동빈 회장에게 완패했다.

2015년 8월 임시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이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건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관한 방침' 건이 신동주 전 부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5분 만에 모두 원안대로 통과된 반면, 2016년 3월 주총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직접 제기한 자신의 이사 복귀와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건이 30분 만에 모두 부결됐다.

이처럼 회사 안에서 주총이나 이사회를 통해 경영권을 가져 오기 힘든 분위기라면,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마지막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경영권 분쟁 이후 2016년 3월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등을 상대로 무려 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 2014년 말부터 진행된 신동빈 회장의 그룹 경영권 장악 과정에 법·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핵심 소송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신격호 총괄회장 해임) 무효 소송'이다.

이 소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제기한 게 아니라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추진한 것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대병원에서 2주의 정신 감정을 거쳐 이르면 2016년 6월께 한국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이 위임장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이 이 소송의 의미를 알고 맡긴 것인지 진의를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직 역전의 기대를 버리지 않은 상태이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 3월 주총 직후 "6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종업원주회 등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성년후견인 지정 무산을 예상하며 소송 카드에도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의 바람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신 전 부회장은 다른 여러 소송에서도 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롯데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 어느 쪽도 쉽게 승복하기 어려운 지분 구조...신격호 총괄회장 '자초'

신동주·동빈 형제의 경영권 다툼을 사실 창업자 신격호 총괄회장이 자초했다는 의견도 많다.

현재 지주회사 롯데홀딩스 지분 구성 등으로 미뤄, 결국 한·일 롯데의 총수 자리에 올라 경영권을 장악하려면 가족(광운사), 직원, 임원·관계사 3개 주요 주주군(群) 가운데 적어도 두 곳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신동주·동빈 형제의 개인 지분은 각각 1.62%, 1.4%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 같은 지분 구도를 통해 두 아들 중 한 명이 능력으로 임직원의 인정을 받아 한·일 롯데의 총수가 되기를 원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의 맹점은 '밀려난 사람이 쉽게 승복하고 포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후계 경쟁자 중 누구라도 어떤 시점에서 우호 지분이 많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직접 보유한 지분만 따지면 결코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2014년 말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해임당하고 2015년 8월 17일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서도 동생 신동빈 회장보다 '표 대결'에서 열세에 있음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내가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구도를 고안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 같은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을 바로 잡을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손가락 하나로 롯데의 모든 것을 움직이던 카리스마는 이제 더 이상 신격호 총괄회장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롯데홀딩스나 광운사 지분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대한 영향력도 미미한 상태이다. 신동빈 회장이 장악한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2015년 7월 28일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한 것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적절한 후계자 선정 시점을 놓쳐 결국 두 아들이 '무한 경영권 다툼'이라는 짐을 안게 된 셈이다.